전자신문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中企 '채무재조정' 가능

▲ 10월 18일 전자신문 21면

재정경제부가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조정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중소기업들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을 보도한 기사

서울경제


실패를 공공자산화 파마

▲ 10월 20일 서울경제 6면

우리 사회는 실패한 경영인이 설 자리가 없어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선진사회에서는 실패한 경영인의 경험을 공공자산화하고 있다. 실패의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방식의 자금조달 및 실패가 수용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한 협회 장홍순 회장의 기고문

산자부,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센터' 설립

디지털전자기술에 대한 경쟁국들의 특허 침해에 대비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의 설립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13억원의 재원을 마련,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예산은 올 하반기 기술료에서 출연키로 했다.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는 대기업보다는 특허분쟁 대처 능력이 취약한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특히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업계가 요청할 경우 '특허 컨소시엄'을 구성, 지원하고 특허분석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1/3 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디지털정보가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분야별 산 · 학 · 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도체와 LED의 경우 정부 기술개발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산 · 학 · 연 특허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리 강화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전국 16개 시 · 도에 있는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 · 고시했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촉진지구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 ·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했고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보조금 교부, 사후 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밖에 25개 촉진지구별로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연결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여당,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산자부 소속의 여당 의원들이 제2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정책자료집을 발간, '벤처 패자부활론'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연구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소속 김태년,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 의원 등 4인은 정책자료집 '중소 · 벤처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를 통해 "국내 벤처산업은 지난 2000년 이후 벤처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침체 및 투자기피, 코스닥시장 부진 등의 요인으로 창업심리와 기업수(투자규모)가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 벤처육성 특별법 추진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벤처전문펀드 제도와 창업실패공모전 실시 ▲벤처 M&A(인수합병)시장과 코스닥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다.

이들은 특히 유망 아이템을 가진 벤처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이들의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의 '리첼린지펀드(가칭)'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연구센터가 내놓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벤처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것이다.